노 동 정 책 연 구
2024. 제24권 제3호 pp.141~147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서 평

인구감소 시대의 고용 패러다임 전환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저, 위즈덤하우스, 2024)

남 재 욱*

지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Ross Douthat은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의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주목한 바 있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 유럽을 떠올리게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라진다(disappearing)’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이나 ‘흑사병’을 언급한 내용상의 표현이 모두 자극적이라 그런지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바 있다.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뿐더러 감소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경험해본 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정부수립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을 뿐 아니라 근대적인 인구추계가 이루어진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에도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길인성, 2001). 대개 인간의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구감소라는 전망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공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작게는 연기금이 고갈되고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크게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이 모두 이와 같은 공포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전혀 다른 전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1인당

*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jwnahm@knue.ac.kr), 사회복지학 박사

GDP를 높이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낙관이다. 지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 수준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인구'가 문제이며, 인구감소는 필연적이라는 시각은 낙관까지는 아니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Mallach, 2024).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한 공포와 낙관 모두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다. 저자인 이철희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자답게 건조한 문투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인구감소라는 현상으로부터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문제인 고용과 생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담담하지만 정교한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인구감소 사회라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든 부정적으로 전망하든 고용과 생산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고용과 생산 영역에서 '사실'에 기초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와 불균형의 문제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한다. 어떤 나라의 최적 인구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규모의 감소 그 자체보다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거나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긴 해도 인구감소의 추세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라기보다는 '가파른 내리막'에 가깝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는 막연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인 '흑사병'보다 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는 주로 인구구조 변화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흑사병과 달리 출생아 수 감소에 기인하는 우리의 인구감소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구구조를 재편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이 책의 핵심 주제인 '일할 사람의 부족'이라는 문제의 원인이 된다.

노동인구 부족 문제 역시 '불균형'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노동인구는 그 총량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중위 전망을 기준으로 볼 때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72년 1,658만 명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22년(3,674만 명)의 45%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가 곧 경제활동인구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인구의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의 고학력화를 동반하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주어진 생산연령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자의 추정에 따르면 2072년의 경제활동인구는 1,635만 명으로 여전히 2022년의 2,938만 명에 비해 크게 적지만 그 감소 정도는 약 56%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비하면 완화된 수준이다. 인구의 고학력화는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학력이 높으면 생산성도 높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들을 염두에 두면 인구감소의 영향을 더욱 완화할 수도 있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며, 장년층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속도를 완화시킴으로써 노동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높일 수 있다면 노동력의 '총량' 감소 문제는 우리의 우려보다 더욱 완화될 것이다. 물론 이는 우리가 주어진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생산성을 성공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불균형' 문제는 설사 고용과 생산성 측면의 성공적 정책이 전제되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다. 저자는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먼저 청년인력이 부족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연령적 불균형을 지적한다. 청년인력의 감소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력과 이동성이 가장 높은 인력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고령인력의 증가로 대체할 수 없다. 주어진 인구구조 내에서라도 청년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이 긴요한 까닭이다. 새롭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는 이전의 고령자에 비해 건강과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이를 위해 임금체계와 직무구조의 변화를 포함하여 연령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인구의 두 번째 불균형은 업종별 불균형이다. 향후 사회서비스업 · 음식점업 · 공사업 · 운송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저자는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인력부족 문제에 주목한다. 의료와 돌봄은 인구고령화에 따

라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자연히 노동수요 역시 증가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의료 인력은 경직적인 의사 공급구조로 인해, 돌봄 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노동공급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인구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료 인력의 적정한 공급확대와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파업'과 열악한 돌봄 노동환경으로 인한 돌봄의 질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분석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민을 통한 노동인구 감소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진단한다. 우선 현재와 같이 내국인이 싫어하는 일을 대신하는 저숙련 · 저임금 인력 중심의 이민정책은 앞으로의 산업 간 인력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 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에 기반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자체계 개선, 이주노동자의 부문 및 사업체 배분 정책 개선, 비전문인력의 고용주 변경제약 완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는 이민이 노동인구 부족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감소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시대의 노동에 대한 좋은 진단과 남아 있는 논의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인구감소시대'라는 우리가 경험해본 적 없는 시대를 막연한 공포나 근거가 부족한 낙관에서 벗어나 자료와 분석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감소라는 주제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저출산(생)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인구감소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노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개인들의 출산의사를 반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해 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이

다.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결국 '얼마나 살 만한 사회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을 반영한다고 보면, 인구감소시대에 대한 적응 그 자체가 저출산 경향을 완화하는 대책의 하나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인구감소 시대의 노동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정확한 문제의 양상을 진단한 것에 그 핵심적인 미덕이 있다. 물론 좋은 진단은 좋은 처방의 필수요건이기에 자연스럽게 이 책의 진단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으로도 이어진다. 다만 처방에 있어서 이 책은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모든 책이나 연구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책의 진단이 담고 있는 함의는 여전히 소중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라는 상황이 생산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두고두고 곱씹을 만하다. 이는 한 편으로 '흑사병'이나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절망에 빠지지 말 것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절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의 핵심이 '진단'에 있다는 점에서 '처방'의 측면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예컨대 이 책은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원론적으로 옳다. 우리나라의 이중노동시장 구조는 청년의 고용을 활성화하거나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길게 일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노동시장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불안정하다는 점 역시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거나 고령자들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자동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한,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에 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조치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높인다면 자칫 불안정한 일자리만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돌봄에 대한 저자의 언급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좋은 교육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역량을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사회적 가치에 맞는 돌봄 일자리의 처우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만으로 충

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구감소가 노동자의 상대적 협상력을 높여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지만(Goodhart and Pradan, 2020), 그와 같은 미래가 보완적인 정책적 · 제도적 노력 없이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자동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굳이 이 책의 아쉬움을 하나 더 꼽자면 좀 더 다루어졌으면 하는 몇 가지 쟁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자동화, 디지털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균형 문제에서 중요한 지역 간 불균형(혹은 지방소멸)의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 책의 결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 권의 책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진단이 워낙 훌륭하기에 이 문제들에 대한 진단도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감소 시대와 노동의 인간화

이 책의 처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지만 큰 틀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인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라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고령자가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장소로 여기는 것, 의료와 특히 돌봄 영역에서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 등은 모두 노동을 인간화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노동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삶을 쥐어짜내 노동시장으로 밀어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구감소라는 위협은 우리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던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알랭 쉬피오 · 박제성, 2016)를 만들어갈 기회인지로 모른다.

참고문헌

길인성(2001).「일제시대 한국인의 인구 추정에 관한 소고」.『시장경제연구』30(2) : 177~191.

알랭쉬피오 · 박제성(2016).「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노동법연구』(40) : 393~449.

이철희(2024).『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서울 : 위즈덤하우스.

Goodhart, C. A. E. and M. Pradhan(2021).『인구대역전』. 서울 : 생각의 힘(백우진 역).

Mallach, A.(2024).『축소되는 세계 :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 : 사이(김현정 역).